

투데이 칼럼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북한이 자주포와 방사포 포탄은 물론, 평소 우리나라를 위협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까지 러시아에 지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골적인 북러 간 군사협력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

북러 군사협력은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러시아의 군사기술 이전을 막을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북러 무기 거래는 지난해 중순부터 확인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직전인 올 8월부터는 해상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122mm 방사포 포탄은 20만 발 이상, 152mm 자주포 포탄은 10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최고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도 철도나 항공편으로 넘어 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복규 본설위원

탄두까지 장착이 가능하다. 러시아가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면 북한으로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위협적인 전술 무기의 실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다.

북한은 무기체계를 만들어서 해외에 판매를 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고, 또다시 그 획득한 외화로 또 다른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의 무기 수출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위협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군수산업은 예상치 못한 특수를 맞고 있다.

모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엔 중동에서도 북한제 무기가 사용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북한제 무기가 세계의 전장을 뒤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점령 마을을 기습할 당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차용 유탄발사기는 1998년 모가디슈 전투 당시 소말리아 민병대가 사용했다.

이 유탄발사기 일부가 북한에서 왔다는 주장이 이어졌는데, 이스라엘군도 이를 공식 인정했다.

한 것으로 보이는 122mm 방사포 포탄에 한글로 '방-122'가 표기된 것도 확인됐다.

이슬람 무장 세력의 손에 북한산 무기가 들어간 경로는 이란이었다는 분석이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이 터지자 북한은 이란에 무기를 공급했고, 이후엔 지속적인 미사일 기술 교류로 밀착해 왔다.

현재 북한산 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동 세력들은 이른바 '저항의 축'이다.

최첨단 기능을 중시하는 현대전이지만, 북한산 무기는 가격을 내세우며 무기 시장을 파고드는 양상이다.

북한은 1960년 말 무기개발과 생산 등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를 창설하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우선 동원해 왔다.

북한이 수출용 무기를 계속 생산하면 전반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구글은 학살 조장 기술 제공 중단하라”



1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구글 본사 앞에서 시위가 열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시위대 “부패는 국가의 적”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의회 앞에서 한 활동가가 시위 도중 “부패는 국가의 적”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설

리걸테크(legal-tech)의 과제

리걸테크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리걸테크는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리걸테크 산업은 수십만 건의 법령과 관계, 규제, 논문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분석한 뒤, 특정 법률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

리걸테크 산업의 핵심 요소는 시장, 기술, 규제다. 국내 리걸테크 업체들은 아직 규모가 작지만, 안정적 수익을 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초거대언어모델(LLM)이 이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와 상담이 직접 쓴 것과 같은 문장을 구현해 내고 있다.

일반인의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대폭 확장된 것이다.

중요한 쟁점은 규제다. 리걸테크에 관한 규제 개혁은 변호사법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해 관계자와 권한 당국 사이에서 수년간 논의만 무성한 상태다. 선도업체들은 규제 위험이 없는 분야를 고르거나,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법 위반의 위험을 피한다.

위법 여부가 모호한 가운데 위험을 감수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리걸테크의 효용이 커 갈수록 기존 변호사법의 규제는 당위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적 구성이나 논의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논란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공문을 거쳐 규제개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 밀집 부작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면서 한국의 저출생과 성장잠재력 훼손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수도권에서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한국의 수도권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비수도권의 청년인재 유출과 수도권 집중은 2015년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됐다.

비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청년들은 남성보다는 여성, 인문사회 및 공학, 자연계열보다는 의약 또

는 예체능 계열의 이동 확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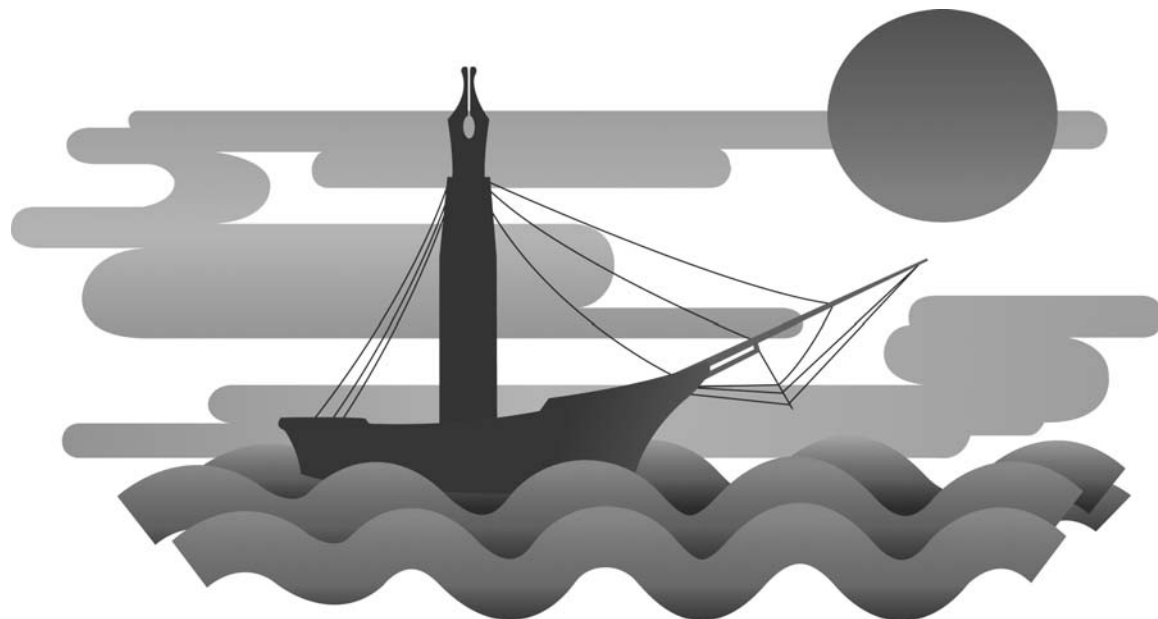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자리에서 큰 소득, 또 문화나 의료 같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의 일극체제는 많은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무한경쟁의 부담을 감수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의 출생이 급감했지만, 수도권의 출생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하면서 전국 출생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해야 한다. 거점도시에 집중해 산업 규모와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수도권 팽창을 막을 수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